

열린세상

정진한

뉴미디어본부장 겸 논설위원



눈부신 봄날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의 혼잡한 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커브길에 플래카드가 여럿 걸렸다. 모두 국내외 정치·외교 등에 대한 선동성 구호가 담긴 것으로 비난의 강도가 매우 켰다. 여야 대결국면이 극에 달하니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봄을 맞은 광주가 다시 따뜻하고 풍요로움을 꿈꾼다는 ‘착한’ 플래카드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며 도심 곳곳엔 이런 플래카드가 지속적으로 휘날리리라. 입지자와 정당 측에선 대세를 잡기 위해 벌써 캠프를 차린 듯한 표정이지만 일상을 영위하는 보통 시민은 계절적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복 충전을 고대하고 있다. 정치가 바로서야 개인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일랑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물론 말이야 바른 말 이긴 하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달 받는 자에겐 천양지차의 뜻으로 들린다. 최소한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닌 듯하고, 어느 세월에 정치가 바로설지 모르는 판에 거기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중양정치’ 끌어들이기 자제

광주의 장삼이사는 ‘정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자 한다. 직장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다 생기는 스트레스를 받길 원하니 정치권의 싸움을 위한 싸움엔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보통시민은 광주가 무럭무럭 커서

광역시다운 풍모를 드러내기를 바랄 뿐이다.

때문에 정치의 계절이 오면 기분이 별로인 분이 많다. 정치꾼들이 표를 얻고 나면 지역현안 해결을 하는 등 마는 등, 존재감 없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지쳐있다. 진정 지역발전을 꾀하는 자라면, ‘광주는 이대로 그냥 가난하게 살자’란 것이 아니라면, 타성에 젖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시민을 한명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지역발전 청사진을 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 제발 중앙 정치권의 이슈를 던지는 것을 삼가길 바란다. 시민들도 지역 행복과 성공을 위한 설계를 잘 짜서 갖고 오는 이들에게 표를 밀어줄 것을 당부한다.

정말로 중앙 정치권의 시급함이 있어 지역민의 지지를 바라고, 뭔가 들고 일어서주길 바랄지라도, 그래도 한번 더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광주의 앞날을 위해 여의도 정치의 대결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시절에는 대의명분으로 무체 안 움직이면 안 되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시대다.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단순 논리로 평온하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온당치 않게 붙잡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자제와 인내심이 광주지역과 시민을 위한 것 이라고 믿는다.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이 되려면 속이 시커맴게 변해야 하고 너 죽고 나 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물들어야 하는가. 오래 전 눈여겨 보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며 차츰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여기서 이름들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삼간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인이 되겠다면 말릴 일은 아니나 조용히 살고픈 시민들은 그들 나름의 삶이 있으니 ‘중양 예측’을 부추기는 바람몰이 같은 것은 중단해줄길 바란다. 이제는 시민들도 의식이 선진화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곧바로 현혹되는 일은 많지

않으리라 보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광주를 좀 조용히 놓아두었으면 한다.

광주는 여야 어느 당이 집권하든 섬 없이 발전해 가야 하는 곳이다. 특별히 광주와 가까운 당이 집권하면 전체적으로 이득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라고 해도 광주는 ‘기울어진 한반도’에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다. ‘광주의 발전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올바른 정치’라고 말하고 싶다. 부연하면 이 지역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쇼핑 공간을 더 확대해주고, 소시민이 일상의 소중함을 애틋하게 느끼게 편익시설을 더 확충해 주고, 교통을 크게 개선하는데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해야

거듭 말한다. 으레 해왔듯이 중앙정치의 이슈를 광주의 광장에 획 던져 확산하길 바라지 말라. 정치를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스마트폰 하나면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며, 과거 대자보와 확성기 등이 등장할 때와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소식을 시시각각 접하고 있는 바, 뭔가 들고 일어날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일어 서게 될 테니 믿고 자제해 달라라는 것이다. 여의도 이슈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무책임하게 뒤덮지 말라는 것이다.

요는 시민 대표성을 갖고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먼저 미래 지역발전을 어떻게 한번 펼쳐볼지 명확히 밝혀주면 좋겠다. 뭔가 정국이 크게 잘못됐다며 애드벌룬을 띄우고선 ‘구국’의 대의명분 속에서 개인 정치적 득실과 표 계산에 급급해지는 표리부동일랑 집어치우고 광주를 크게 도약시킬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광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면 광주를 광주라고 쓰지만 “발전”이라고 읽는 분이다.

자산IC 폐쇄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이다. 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폐쇄에 대한 확신도 이 같은 ‘안전’에서 발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자산IC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산IC 좌·우측 진출로가 터널이 없는 일반 진출로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적게는 9.9배에서 많게는 14.3배까지다.

게다가, 대안적 접근을 시도했음에도 결과가 부정적이다. 차량 진출 실패율이 일반 진출로에 비해 8배 높게 나타났다. 좌측 진출로에 대해 노면색갈유도선,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주요요인은 터널과 진출로 간 짧은 이격거리다. 애초부터 좌·우 진출입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 시설물인 터널과 도로 간 거리가 문제의 발단이었던 셈이다.

이제는 개통 불가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결정만이 남았다. 자산IC가 제 기능을 단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폐쇄되거나, 긴급차량 등을 위한 일부 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말이다.

자산IC 설치 목적을 복기해보면, 그 시작은 1997년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착공 시 자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 관광객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산IC 설치가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후 2008년 자산유원지 발전추진위원회가

자산유원지 발전 방안을 건의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민협의 과정 등을 거쳐 2015년 지금의 위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해 자산IC 공사가 완료됐다.

36년 전, 자산IC는 ‘자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시민들의 바람으로 태동했다. 한때 지역관광명소로 손꼽히던 자산유원지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자산IC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36년을 기다린 지역민의 염원이 간데없다. 이대로 자산IC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안을 찾기 위한 더한 노력을 요청해본다. 이번 용역에 도입했던 보완1·2의 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안전지대, 과속방지턱, 노면색갈 유도선, 과속단속카메라 등) 확충에서부터 시간대별 점진적 개통 등 다각도의 해안 마련에 중점을 모아야 한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담보할 수 없기에 깊은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36년 지역민의 바람과 77억원 형세 낭비, 단일한 행정의 후진적 사례 등을 고려한다면, ‘개통 불가’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내일이 빛나는 광주’만들기를 위한 오늘의 고군분투를 기대한다.

‘소년범죄’ 사회적 보완 장치 필요

기 위해서는 솜방망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소년들이 다는 범죄를 저

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전남 상생이란 말 자제해야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표 싱크탱크인 광주 전남연구원 재분리 의견을 광전연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사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광주에는 자체 연구원을, 전남에는 기존 연구원을 승계한 뒤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광전연 분리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찬반양론이 거뻐졌다. 만일 이날 이사회에서 분리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광주전남연구원지부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지금도 인력 규모, 연구 출연료, 연구 환경 등이 다른 시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데 분리하면 어느 세월에 연구 자원의 다양화와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재분리하면) 2015년 통합 후 형성된 유무형의 투자는 헛수고가 되고, 성과는 오히려 과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 전에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연구원 재분리 추진에는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소통의 과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광전연 외부의 오피니언 리더, 시민

단체 등도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광전연의 분리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8년 전인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이뤄진 광전연 통합이 다시 분리되는 것은 통합과 상생이란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주와 전남의 지리적 환경과 산업, 문화 여건이 달라 연구 수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8년 만에 연구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연구 독립성, 자율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뒷전이고 분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정방식은 광전연의 분리만이 아니라 최근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이 추진하는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도 적용되고 있다. 모두 제각각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 뿌리, 역사공동체라는 인식은 온데간데없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은 상생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청소년범죄 예방 다 같이 지혜 모으자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해 지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폭행과 절도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5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로 검거된 만14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은 6,91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61명, 2021년 1,914명, 2022년 2,336명으로 매일 6명 이상의 청소년이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4,226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3,370건, 성폭력 380건, 강도 22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무안에서는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고등학교 A 군(15)과 공병 2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소년 범죄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 행태는 어른들을 흉내 내

는 것이며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어른들의 유흥에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풍조도 청소년들을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하고 있다. 한때의 잘못으로 남기기에는 범행종류도 다양하고 범행강도 역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일차적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다. 그러지 않아도 청소년 주변에는 인터넷 폭력물이나 음란물과 같은 온갖 유해물질이 범람해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어른들이 염치를 알고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막가자식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청소년이 명드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여 나갈지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

교권 회복, 교육공동체 회복에서 출발을

기저수첩



황애란

사회부 부장대우

“교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아동학대 신고되는 것이 싫어 선생님 중 일부는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루한 소송에 시달리는 것보다 선생님 본인이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한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우리 사회 존경의 대상이었던 선생님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웃픈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는 수도룩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일탈 행위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한 채 인내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척 남기고 있다. 되려 교사로서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혹시 아동학

대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오죽하면 교직을 천직으로 알았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수업을 비롯해 생활지도, 학생·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업무무담은 큰 데 비해 담임 수당은 적고, 교권이 추락해 생활지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나 신규교사까지 담임 맡기를 모두 꺼리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무너진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선 교육공동체 간 존중과 신뢰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 정책·법률적 뒷받침과 함께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지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학생·교사·학부모가 사회적 논의에 나설 때이다.